

전남 지자체 통합 반발 지역민 입장 들어보니

# “정부, 지역민 설득할 대안부터 내놔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전국적인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무안반도도 불리는 목포와 무안, 신안 그리고 광양만권에 속한 여수와 순천, 광양 마지막으로 강진과 장흥 등 3개 권역에서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안과 광양, 장흥이 각각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통합논의가 시작되기까지는 장애물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 무안

◇최병삼 전 무안군의회=무안과 신안, 목포가 통합되면 무안의 문화와 가치성이 다른 시에 의해 사라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인구가 37만여 명에 이르는데, 무안군민 26만 명으로 통합시장은 목포사람이 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예산을 승인하는 시의원도 목포 22명, 무안 7명, 신안 8명으로, 이 수로는 무안군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적으로도 목포는 상업업, 신안은 수산업, 무안은 농업중심이어서 통합이 될 경우 행정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

역상권 붕괴가 우려된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혐오시설들이 무안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박준범 무안군 주민=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종시를 세계적 국제 행정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던데 지금은 세종시 원안대로는 충청권이나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도 언제든지 행정개편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 광양

◇김홍원 길호 공유수면 매립조합장=지금은 광양시만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통합에 적극적인 것을 감안

## 소규모 지역 배려 없는 흡수통합 안돼

## 낙후지역 합칠땐 SOC 등 집중 효과

할 때 인근 시·군과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어떠한 실리를 얻을 것인가를 찾아야 할 때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여수와 순천에 주고, 통합시의 중심은 광양에 유지하면 된다.

◇이요섭 참여연대 사무국장=정부의 특별법 통과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해도 늦지 않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3시 통합에는 반대한다.

◇이돈구 광양시의원=광양만권 통합은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 여수와 순천, 광양이 통합한다면 도시 경쟁력은 있었지만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주여건도 다른 지역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수 광양시민=광양과 순천시의 미묘한 갈등이 3시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시간 통합에는 신뢰가

중요한데, 서로간의 믿음이 없으면 통합논의가 어려울 것이다.

## 장흥

◇김희용 장흥군 행정동우회장=장흥과 강진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의 명분이 있다고 본다. 지난 2005년에 강진과 장흥군수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혁신도시로 선정해달라는 선례도 있었다. 하지만, 자율통합 분위기에 앞서 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채은하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소단위 지역 통합만으로는 경쟁력 차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통합에 따른 확실한 발전의 비전도 없는 상태

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며, 통합이라는 성과를 노리는 유치한 발상이다.

◇김기홍 장흥군문화원장=장흥과 강진의 지리적 구조나 양 지역의 정서를 감안할 경우 통합이 되면 장흥은 강진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양 지역민의 통합 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보성, 고흥, 완도, 강진, 장흥 등 중남부권을 한데 묶는 광역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종태 장흥군 새마을지회장=장흥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면서 군세가 약화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직은 불편함이 없는 만큼 구대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장영복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협의회장=위낙 장흥·강진지역 모두가 낙후한 현실을 볼 때 통합하면 분명히 SOC 분야 등에 획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장흥·강진 통합을 이룬 뒤에 보성, 고흥, 완도까지 확대한 광역권 통합으로 가야 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무안=김민준기자 jun@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민주 의원들도 통합 ‘지역差’

도시·규모 큰 지역구 찬성

구·군 등 소규모 지역 반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방침을 놓고 민주당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못한채 소속 의원들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역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출신 의원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나 인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구 의원들은 통합이 주민 편의와 지역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농촌이나 구·군 등 소규모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주변의 큰 지역에 흡수돼 통합지자체 내의 번두리로 전락하거나 통합과정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이는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비슷한 현상으로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도시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13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생활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데 행정만 분리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큰 지역들이 있다”며 “대응적 차원에서 지역을 통합,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농어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른 의원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부자 지자체끼리 묻히고 가난한 지역은 배제될 수 있다”며 “특히 도시지역의 혐오시설만 농촌지역으로 옮겨와 또다른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11일 가진 의원총회에서 지자체 자율통합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 및 자율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국회 내 특위에서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만든 뒤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합에 대한 주민 의사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가 최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지난 11일 U대회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U대회 유치성공 기념 시민 한마당 행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 U대회 지원 특별법 발의

### 남북단일팀 구성 등 지원 방안 담다

광주시가 개최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을 목표로 발의됐다.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을)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이 법제화할 경우 이 법을 모태로 한 U대회 조직위원회가 내년 1월께 출범해 대회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제정 전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이하 U대회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발의 서명하는 등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어 현재까지 법안 제정에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김영진 의원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국회 내에 'U대회 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소관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서 U대회가 다른 대회와의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병합 처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U대회 지원특별위원회'가 꾸러지면 U대회 특별법은 특위의 심사, 특위전체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는 등 법적 절차 수순을 밟아 제정된다.

김 의원은 "U대회 특별법이 독자적으로 제정될 수도 물론 최선을 다하는 한편, 두 개 법안이 병합처리될 경우에도 남북단일팀 구성 등 핵심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 기존 경기대회와 달리 U대회 특별법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체육 교류를 통한 남북 화해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에는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대회를 통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U대회 준비를 포함해 대회 개최를 총괄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대회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이 문구는 정부의 확고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에릭 샤프트 스포츠연맹 사무총장 광주 방문

### U대회 개최 업무·프로그램 등 협의

광주시가 개최할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를 주관하는 국제스포츠연맹(FISU)의 에릭 샤프트(사진) 사무총장이 17일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시는 13일 '에릭 샤프트 사무총장이 2015 U대회 광주 개최 확정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U대회 개최 업무 절차를 협의한다"고 밝혔다.

에릭 샤프트 사무총장은 16일 서울에서 김윤석 경제부시장과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패트릭 벨리,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사인 텐츠, IB스포츠 관계



자과 만나 경기운영시스템과 프로그램 등 협력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에서는 17일 전남대 운동부화관에서 'Management of a Major Sports Event'를 주제로 강의한 뒤 18일 박광대 광주시장을 예방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디서 빌렸어도 상관없습니다**

러시앤캐시의 최대 **30일간 이자면제**는 늘 열려있습니다

무카드 출시기념 **빅히트 이벤트 30일간 이자제로!**

최대 30일 이자면제에 최대 연금리 10% 인하

지금 가까운 지점과 통화하면 상담에서 대출까지 바로 통합니다

<b>신입 고객 혜택</b> 최대 30일 이자면제 + 최대 연금리 10% 인하	<b>신용도 높은 고객 혜택</b> 신용도 높을수록 이자면제 기간 연장
<b>신입 고객 혜택</b> 최대 30일 이자면제 + 최대 연금리 10% 인하	<b>신용도 높은 고객 혜택</b> 신용도 높을수록 이자면제 기간 연장

**역시! 러시앤캐시** 062-224-7979 062-383-7979 061-755-7979